



시원~해요

불볕 더위가 이어진 2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찾은 한 어린이가 음악분수대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폭염을 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간 경관’ 공공 따로 민간 따로

광주시, 60억 들여 ‘디자인 도시’ 어울리게 조성

모텔 등 유흥업소는 원색·네온 과다...규제 시급

광주시내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야간경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야간경관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옛박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텔과 유흥업소 등 상업시설의 네온사인과 강한 조명으로 인해 광주의 야간경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에만 공공시설물 8곳과 협약을 맺고 모두 60억5천만 원을 들여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대상 시설물과 예산은 중외공원 주변 20억 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18억 원, 조선대 5억 원, 시청사 4억 원, 풍암저수지 4억 원, 상무소각장 3억5천만 원, 제석산 구름다리 3억 원, 전남대 치과대학 3억 원 등이다.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들 공공시설물 주변 모텔이나 유흥업소 등 민간 건축물은 업주나 건축주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데다 높은 광고 효과를 위해 강한 조명을 선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가 있지만 권장은 할 수 없되 강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제외하면 실질적 전무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난 뒤 이를 민간건축물로 확산시킬 방침이었으나 업주나 건축주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데다 높은 광고 효과를 위해 강한 조명을 선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가 있지만 권장은 할 수 없되 강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로켓트전기 44명 고소

해고자·민주노총 관계자 등 업무방해·폭력 혐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로켓트전기 광주공장이 집회 질서유지인 등 40여 명을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로켓트전기는 최근 “해고근로자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이 올해 1월부터 4차례 공장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해고자

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44명을 고소했다. 이 중 35명은 집회신고 당시 ‘질서유지인’으로 기재된 사람으로 대부분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라고 경찰은 전했다. 로켓트전기는 고소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공장에 계란과 페인트를 투척하고 공장 출입문을 훼손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질서유지인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를 막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됐을 때 사법기관은 집회 주최 측이 내세웠던 질서유지인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질서유지인은 집회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로켓트전기 광주공장은 재작년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 11명을 해고했으며 해고자와 노동계는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집회를 벌여왔다.

“교도소 개방형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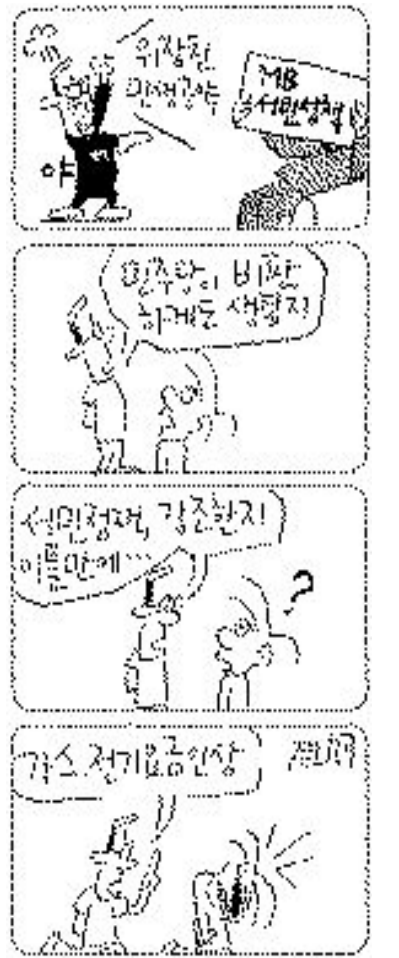
국가가 ‘굴욕감’ 배상해야”

대법원 판결

교도소 화장실에 출입문이 아닌 ‘가리개’만 설치해 이용토록 한 것은 수형자들에게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김모(26)씨가 “교도소가 개방형 화장실을 쓰도록 해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동료 수형자에게 불쾌감을 주게 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감도상해죄와 특수강간죄 등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방안에 높이 60~70cm의 ‘가리개’만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해 피해를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으로 인한 손해(50만원), ‘조사실 수용에 따른 운동금지 위자료’(50만원) 등 모두 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화장실’과 ‘이송착오’에 대한 배상만 인정하고, ‘운동금지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한 원심은 깬다. 한편 광주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은 2005년 말부터 화장실 문을 설치했으며, 일부 미설치 시설의 경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광주교도소는 2006년 10월께 높이 2m, 폭 80cm 크기의 화장실 문 설치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최근 교도소에 설치된 화장실 문에는 지상에서 90cm까지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선팅이 돼 있을 뿐 110cm는 투명한 아크릴로 설치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자살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화장실 문 전체를 선팅해선 안된다”며 “출입문 설치만으로도 냄새나 소리 등으로 인한 수형자들의 불쾌감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나원침 (7841) 김중두



남구 아파트에 강도

28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남구 H아파트 1층 A(아·42)씨 집에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 흉기로 가족을 위협한 뒤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인은 안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친 뒤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작은방에 있던 A씨의 딸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경찰은 172cm의 키에 소리소리한 체격의 남성을 쫓고 있다. /최경호기자 khh@kwangju.co.kr

고수익 미끼 82억 가로챈

유사수신 대표 등 징역형

광주지법 선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대표와 모집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28일 다단계 방식을 통해 8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와 전모(5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허황된 사행심을 조장해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방법과 횡수,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와 전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성의 한 아이스크림 생산 업체에 투자하면 연 130~15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

여 4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천500여차례에 걸쳐 8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급정거’ 꾸짖다 음주운전 들들

○“술취한 운전자가 앞차의 급정거에 화를 내며 쫓아가 향의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들들나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8)씨는 28일 새벽 0시15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28)씨가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차에서 내려 쫓아가 향의하던 중 김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은 폭행혐의로 이씨를 조사하다 “당시 술 냄새가 났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측정을 실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고속비, 장학금 위한 확실한 대책!!!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http://edu.ingang.go.kr>

3만원의 행복

강남구립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제공할 기회
연회비 3만원에 7,500강의 무료 수강

- 전국 유일의 무료교육, 명품강사 등 특목고 고사
- 무료수강료 1회 강사료 포함-실시간 학습
- 100% 만족도 보장, 철저한 수강 관리
- 수능 내신 대비수능특강특강고사 대비반
-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의 우수기록

☎ 02-1577-9100

명품아울렛-럭시티
 50여 명품브랜드 경주 최대 규모의 하이 패션몰

최고급 명품
 볼수록
 신우주
 기대

명품을 모르는 명품시장
 명품할 향주님을 모십니다.

명품아울렛 (주)럭시티
 입점문의 : 053-712-0000